

부마민주항쟁 결락기록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마산항쟁을 중심으로

Documentation Strategy of Missing Archives in BUMA Democratic Uprising
: Focusing on MASAN Uprising

최규명(Choi, Gyu Myeong)**

1. 머리말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2. 부마항쟁 결락기록 수집방법론 검토
3. 부마항쟁 개요 및 마산항쟁 행위그룹
 - 1) 부마항쟁 개요
 - 2) 마산항쟁 행위그룹 유형 및 활동
4. 마산항쟁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분석
 - 1) 마산항쟁 행위그룹 세부활동 및 생산기록 유형
 - 2) 마산항쟁 도큐멘테이션 영역
 - 3) 마산항쟁 행위그룹 결락기록 조사
5. 부마항쟁 결락기록 관리방안
6. 맺음말

* 이 논문은 2022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연구논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경상남도경찰청 기록연구사(che7691@korea.kr).

■ 투고일: 2022년 06월 16일 ■ 최초심사일: 2022년 07월 02일 ■ 최종확정일: 2022년 07월 14일.

■ 기록학연구 73, 125-159, 2022, <https://doi.org/10.20923/kjas.2022.73.125>

〈초록〉

이 연구는 부마항쟁 결락기록에 관한 수집 등의 기록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록학적 수집방법론을 검토하고 Larry Hackman과 Joan Warnow-Blewett이 제시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모델을 적용하여 예비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부마항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기록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범위를 마산항쟁으로 좁혀, 마산항쟁을 중심으로 예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마산항쟁의 행위그룹의 유형과 활동을 분석하여 마산항쟁 도큐멘테이션의 영역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산항쟁의 일부 행위그룹을 선정하여, 직접 기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결락기록의 현황 조사 및 분석, 수집정책 마련과 능동적 수집, 수집기록의 관리정책 수립 및 통합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부마민주항쟁, 마산항쟁, 결락기록,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록수집, 역사기록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archival collecting methodology so that the documentation method such as collecting about missing archives in BUMA Democratic uprising is prepared for and it progressed the pre-analysis by applying to working models of 'documentation strategy' that Larry Hackman and Joan Warnow-Blewett suggested. First of all, I generally examined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narrowed the scope into MASAN Uprising in order to deduce the effective documentation method, performing the pre-analysis centering on MASAN Uprising. In succession, by analyzing the type and activity of an action group of MASAN Uprising, I organized the area of MASAN Uprising documentation. Finally, by selecting some action groups of MASAN Uprising, I investigated archives in person. Based on this, I suggested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present-condition of missing archives, the preparation for collecting policies, active collecting,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policy of collecting archives and the detailed management strategy about integrated management.

Keywords : BUMA Democratic Uprising, MASAN Uprising, Missing Archives, Documentation Strategy, Collecting of Archives, Archives

1.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부마민주항쟁(이하 부마항쟁)¹⁾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다.²⁾ 부마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었으나 이들 민주화운동에 비해 비교적 사회 일반에 덜 알려져 있다. 이는 당시, 삼엄한 언론통제 속에서 항쟁의 소식이 외부로 전파되지 못한 점과 곧이어 일어난 10·26사건으로 전국이 순식간에 계엄령 하에 놓인 것에 기인한다. 이후 12·12사태와 신군부의 등장으로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부르짖었던 부마항쟁의 정신은 극도로 위축되고 잊혀졌고 뒤

1)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10월 18일 경남대 시위를 시작으로 마산으로 확산하였다. 10월 18일 0시 부산 일원에 발령된 계엄령과 10월 20일 12시 마산 일원에 발령된 위수령을 기점으로 두 도시에서 시위는 각각 사그라졌다. 부마항쟁에 대하여 지역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부산(민주)항쟁, 마산(민주)항쟁으로 구분하여 명명하기도 한다.

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어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이 신군부의 폭압적인 진압과 무자비한 폭력에 짓밟히면서³⁾ 부마항쟁은 한동안 역사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기억을 되살리고 기록하기 위한 노력은 암암리에 이어졌고 축적되어왔다. 항쟁이 일어난 지 10년 후인 1989년에 이르러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집단적 연구 성과물인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되어 그동안 ‘부마사태’로 불리던 명칭이 ‘부마민주항쟁’으로 공식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부마항쟁에 관한 연구는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매년 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부마항쟁 연구를 촉진했다. 2000년 이후에는 부마항쟁의 연구가 절정에 달했다. 잇따라 기념단체나 연구조직이 설립되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진행된 일련의 ‘과거사 정리 사업’은 항쟁에 대한 연구열을 크게 자극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수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그중의 하나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관변자료(공공기록)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부마항쟁 연구의 기초 작업이자 부마항쟁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홍순권 2011, 4-36)

특히, 당시 부마항쟁에서 시위를 직접 진압 및 수사하고, 그 진압과 수사를 지원한 기관에서 생산한 공공기록의 충실한 수집은 부마항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부마항쟁 관련 단체에서 부마항쟁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해 왔다. 또한 최근, 수집된 기록을 토대로 부마항쟁의 공식적 조사결과인 「부마민주항쟁 진상 조사보고서」를 확정하여 공개했다.⁴⁾ 그러나 지금까지 부마항쟁 관련 기록의 상당수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 생산기관에서의 보유유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사와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군기관, 정보기관

3)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거를 부마항쟁을 이어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은진 2020, 178)

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 제2021-5호(2021.12.30.)

등에서 생산한 기록은 일부라도 수집되고 확인되었으나 이외의 기관⁵⁾에서 생산한 기록에 관한 조사나 수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⁶⁾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마항쟁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산항쟁을 중심으로 부마항쟁 결락기록⁷⁾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등의 기록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마산항쟁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결락기록을 보완하여 부마항쟁 기록의 보다 완결된 수집·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 접근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군기관 및 정보기관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부마항쟁 단체 차원의 조직적 조사와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역사연구에 필요한 기록을 특정해서 역사기록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마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생산했지만, 현재는 결락된 역사기록이 연구의 대상이다. 현재까지 부마항쟁의 사료로서 결락기록이자 역사기록에 관한 전문적 연구는 전무하다. 이은진(2008)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수집된 기록을 통해서 부마항쟁 특

5) 이 기관에는 마산항쟁에서 시위 진압을 지원한 도청, 시청, 동사무소, 교육청, 학교 등이 있다. 한편 마산항쟁에서 시위 진압을 주도한 경찰에 대한 기록의 수집도 군 기관이나 정보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6) 마산항쟁 시위 진압을 지원한 공공기관 중에서 부마단체의 자료수집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창원시(마산합포구)가 유일하다. 자료수집의 방식은 공문을 통해서 관련 기록의 보유유무를 확인하였다.(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21, 40) 반면 ‘유치준 사망사건’ 관련 자료의 조사과정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마산합포구청의 문서고를 확인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같은 책, 252)

7) 결락의 사전적 의미는 ‘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떨어져 나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5, 2.)의 뜻이므로 결락기록은 ‘폐기 등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는 하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등의 기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히 마산항쟁을 새롭게 분석하고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저작(홍순권 2011, 24)으로 이 연구의 방향과는 다르다.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기록학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부마항쟁에 관한 연구는 아니나, 부마항쟁처럼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연구 사례가 여러 편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기록의 수집 등 기록화와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룬 김유승·류반디(2015)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연구한 이상민(2016)이 있고,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를 연구한 고나경(2019) 등의 사례가 있다.

먼저 김유승과 류반디는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하여 관련 이론을 연혁적으로 검토⁸⁾한 후 예비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기록 생산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산개된 관련 기록의 현황, 결락된 기록의 파악과 생산, 주요 보존기록의 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된 도큐멘테이션 계획 수립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상민은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기관에서 수집한 5·18 기록의 특성과 이 기록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조건과 요구를 분석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아카이브즈가 추진해야 할, 5·18기록에 관한 수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기록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5·18기록에 적합한 수집전략 수립을 주장한다.

고나경은 웹툰 플랫폼인 L코믹스의 불공정행위로 촉발되어 1년여의 시간 동안 웹툰·웹소설 작가들과 사측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총칭하는 L코믹스 사태를 기록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사건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의견을 수집한 것이 주목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으로 기록화

8)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협력 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락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작' 등 5가지 특성을 갖는 평가, 선별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목표와 방향, 원칙, 범주, 주제 그리고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잔존기록에 관한 조사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는 연구도 있다. 정상희(2016)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된 공공건축물인 청남대 건립과정의 잔존기록⁹⁾을 조사하여 공공건축물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록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문헌 등의 자료를 통해 생산기록 목록을 추정하고 기록의 잔존을 확인하는 일련의 방법은 결락기록의 조사 시 참고하였다.

2. 부마항쟁 결락기록 수집방법론 검토

부마항쟁 결락기록의 수집방법론 검토에 앞서, 먼저 부마항쟁 단체에서 수집한 결락기록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마항쟁 결락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단체로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부마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하 부마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항쟁기념관’ 등이 있다. 현재까지 부마위원회에서 490건(부마위원회 2021, 28), 부마재단에서 3,425건¹⁰⁾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항쟁기념관에서 수집한 기록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부마항쟁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¹¹⁾

9) “잔존”의 사전적 의미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결락”과 의미의 차이가 있으며, “결락”은 “잔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5. 2.)

10) <http://www.buma1979.com/portal/main.do>

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기록의 목록을 확인하였으나 목록만으로 부마항쟁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민주항쟁기념관에는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수집된 기록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마위원회에서 수집한 490건의 기록 중에서 학술논문, 단행본 등을 제외한 335건의 기록에 대한 생산기관별 수집현황을 보면, 국군보안사령부 93건, 중앙정보부 42건, 합동수사단과 수사본부 26건 등 상당수가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이다. 이에 반해 항쟁기간 동안 시위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자를 수사한 경찰에서 생산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소량이다. 이 중에서도 부산지역의 각 경찰서에서 생산 기록은 그나마 16건이나 되나, 마산지역의 경찰서에서 생산한 기록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부산지역은 시청이나 시청의 경찰국에서 생산한 기록도 일부 수집되었으나 마산지역은 시청이나 도청 경찰국에서 수집된 기록이 전혀 없으며(부마위원회 2021, 415-423)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나 평가와 향후 수집에 관한 계획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¹²⁾

한편, 부마재단에서 수집한 기록에서는 부마항쟁 참여자의 구술기록과 부마항쟁 당시를 취재한 언론인의 취재기록,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생산한 기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록은 부마항쟁 이후 생산된 기록으로, 생산기관도 민간단체 등에서 발간한 간행물이 다수를 차지한다. 항쟁당시 생산된 기록에 대한 수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수집지침¹³⁾이 마련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수집전략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처럼 일부 수집기록의 편중, 수집활동의 어려움 등과 포괄적 기준으로서 수집전략의 부재는 부마항쟁 단체의 수집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향후, 결락기록의 체계적인 수집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수집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된 수집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학적 수집방법론으로서 유용하게 거론되는 것이 기록화 전략, 즉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다.

12)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2021)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13)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료관리 지침(2020)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생산자, 보존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 선별 방법론으로, 이 전략의 핵심 요소는 기록화할 영역을 도출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실재하는 기록을 대상으로 도큐멘테이션 상태를 분석하여 생산을 포함한 적절한 기록 확보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며, 그러한 계획을 복수의 주체가 협동하는 다기관 수행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85) 따라서 수집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주제나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하여 기록화할 영역을 명확히 결정하고, 보유기록이나 결락기록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생산을 포함한 수집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수집 등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1970년대부터 사회운동, 소수집단 등 주류 아카이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를 기록으로 포착하려던 아키비스트들의 노력으로 1984년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AA)의 연차회에서 Helen Samuels, Larry Hackman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고나경 2019, 62-63) 이 논의 이후, Helen Samuels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이 전략의 핵심적인 활동을 기록화해야 할 주제의 정의와 선정 등 4가지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기록화해야 할 주제의 선정 시 유의해야 할 것은 현재의 역사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amuels 1986, 116-117)

그 후 Larry Hackman과 Joan Warnow-Blewett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모델은 예비단계를 포함한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비단계로서 ① 도큐멘테이션 영역의 정의와 예비 분석 단계가 있고, 이후 단계는 ②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작성, ③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전략 실행, ④ 기타 그룹의 전략 실행, ⑤ 도큐멘테이션 보고, ⑥도큐멘테이션 영역의 재검토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Hackman & Warnow-Blewett 1987, 18-29)

한편,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특징 등을 정리한 대표적 국내 연구로는 설문원(2010)의 연구가 있다. 설문원은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탐구하였는데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1984년 소개된 이후 계속 진화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방법론적 특징을 특정 영역에 대한 기록 수집, 협력적 수집, 기록화 범주와 대상에 대한 사전 분석, 결락된 범주와 대상을 위한 기록 생산, 자문조직의 운영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특정 사건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연구는 앞서 살펴본 김유승과 류반디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Hackman과 Warnow-Blewett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 모델에 따라 노근리 사건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고 노근리 사건의 초점 그룹을 분석하여 도큐멘테이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기록을 시기별, 생산자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위 연구 사례에서 활용된 Hackman과 Warnow-Blewett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 모델은 비록 초창기 모델이기는 하지만 기록의 수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김장환 2015, 214) 최근까지도 이 실행 모델에 따라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사례¹⁴⁾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유효한 제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Hackman과 Warnow-Blewett이 제시한 지침을 기초로 하고,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과 실행 방법론을 보완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부마항쟁의 개요를 살펴보고 범위를 좁혀서 마산항쟁의

14) 이 실행모델에 따라서 김유승·류반디(2015)와 고나경(2019)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행위그룹의 유형과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예비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 범위로 한정하여 결락기록을 직접 조사해 보고 이를 결락기록 관리방안에 반영하였다.

3. 부마항쟁 개요 및 마산항쟁 행위그룹

Larry Hackman과 Joan Warnow-Blewett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모델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부마항쟁의 발생배경과 주요 전개과정, 의미 등에 대해서 개괄하고 이어서 이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인 마산항쟁의 행위그룹¹⁵⁾과 그 행위그룹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할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분석에 앞서 마산항쟁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유형화하고 주요활동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1) 부마항쟁 개요

부마항쟁은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특히 당시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수출중심의 산업도시였던 부산과 마산지역은 그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부산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마산지역의 1979년 부도율은 전년도에 비해 37%나 증가했고 체불임금도 전년도에 비해 7배나 증가했다. 기업의 부도율 증가와 노동자의 체불임금 증가는 도시빈민, 실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연결되었고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또한 1977년도부터 도입된 부가가치세와 1979

15) 선행연구에서는 이 그룹의 명칭을 '초점그룹'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행위그룹'으로 변경하였다. 행위그룹은 기록의 생산 주체이다.

년의 물가상승률은 서민 생활의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와중에 'YH사건'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등의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들은 2학기 개강과 더불어 학원가에서 시위와 정권의 탄압에 대한 대중적 항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정승안 2018, 2012-213)

1979년 10월 16일에 부산대에서 시작된 부산항쟁의 단초는 전날 10시경 교내에 뿌려진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이었다. 그리고 10월 16일 10시경 주도자들의 선동에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후 계속 늘어난 시위대는 교문을 사이에 두고 진압부대와 대치 후 교외 진출에 성공했다. 시내에서의 시위 양상은 학생과 시민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민중항쟁'의 성격을 띠었다. 오후 5시에는 2만 명 이상의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시위는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날(17일) 아침부터 경찰병력이 삼엄한 경계태세를 펴고 있는데, 대학들은 임시휴교 조치를 단행했지만, 시위는 계속되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이날의 시위에서 시위대는 방송국, 도청, 세무서, 파출소 등을 파괴하였다. 자정에는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8일에도 시위는 이어졌으나 무장계엄군의 물리적 공격을 받고 시위대는 분산되었다. 이것으로 사흘에 걸친 부산지역에서의 민주항쟁은 끝나고 그 불길은 마산으로 이어졌다.(김경호 2000, 11-14)

10월 17일부터 경남대 학생들에게 부산의 시위소식이 퍼지면서 교내 분위기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10월 18일 아침, 경남대학 교내에 정권 비판과 민주주의 회복, 시위 참여 등에 관한 '격문'이 붙여졌다. 또한 이전부터 시위를 준비해 오던 일부 학생들이 부산항쟁의 소식에 고무되면서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도서관 앞에서 모이기로 하고 그 소식을 각 학과 학생들에게 급히 전달했다.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도서관 앞으로 속속 모여들자 학교 당국은 긴급 교수회의를 열어 10월 19일부터 무기한 휴교를 결정했다. 이에 학생들은 반발했고 뒤이어 주도 학생

의 선동연설에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며 스크림을 짜고 교문을 향해 움직였다. 이렇게 마산항쟁의 학생시위도 시작되었다.(부마위원회 2021, 201-202)

이후 시내로 진출한 학생들은 변화가에 산발적으로 집결하거나 흩어지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시위대에 시민들이 가담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날이 저문 후 시위대의 시위는 한층 격화되어 마산 시내 여러 파출소와 공화당사, 방송국 등에 투석하는 등의 습격을 가하였다. 다음날인 19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저녁이 되자 시위대는 동사무소와 파출소로 몰려가 파괴하였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질렀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의해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하였다. 시위의 전개와 확산을 심상치 않게 여긴 정부는 다음날인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과 창원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이 조치 이후 마산항쟁도 급격히 위축되었다.(이은진 2008, 133-294)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합세하여 일어났던 부마항쟁은 10·26사건을 촉발해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하게 하였다. 이후 신군부의 등장으로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민주사회로의 회복은 좌절되었으나 부마항쟁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이 되었다.(부마위원회 2021, 384)

2) 마산항쟁 행위그룹 유형 및 활동

마산항쟁의 주요 행위그룹의 유형과 활동을 분석하는 이유는 마산항쟁의 행위자로 어떤 개인과 기관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과 활동,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사건을 둘러싼 정보와 기록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이다.(고나경 2019, 198) 마산항쟁 당시의 주요 행위그룹으로는

① 시위 전개 그룹, ② 시위 진압 및 수사 그룹, ③ 시위 진압 및 수사 지원 그룹, ④ 시위 진압 및 수사 과정의 피해자 그룹, ⑤ 사법처리 및 사법처리 피해자 그룹, ⑥ 시위 전개와 진압 과정의 목격(지원) 및 취재 그룹, 그리고 ⑦ 시위 진압 및 수사 등의 통제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먼저 ① 시위 전개 그룹의 핵심에는 경남대를 비롯한 대학생 그룹이 있다. 이들은 마산항쟁의 시작부터 진행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함으로써 당시 마산항쟁의 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룹이다. 현재도 이들 중, 일부는 부마항쟁 관련 단체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산항쟁에서 시위를 전개한 다른 한 축은 시민 그룹이다. 이들은 대학생들이 교외를 벗어나 도심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위대에 합류했다. 이들 그룹은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민그룹에는 자유수출지역의 노동자뿐 아니라 상인이나, 회사원, 실업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그룹으로는 소수이지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의 학생 그룹이 있다. 첫날의 시위에서 공화당을 공격한 시위대에 인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이 합성을 지르며 시위 대열 속으로 합류하기도 하였다. 또 시위로 검거된 인원 중에서 고등학생 5명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에게도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이 자행되었다.

다음은 ② 시위 진압 및 수사 그룹이다. 마산항쟁의 시위 진압 선두에는 경찰 인력이 나선 만큼 시위 진압의 중심에는 경찰 그룹이 있다. 마산항쟁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마산경찰서 외에 경남도경 경찰국 소속 경찰, 부산시 경찰국 소속 기동타격대와 창원, 진해, 고성, 함안, 합천 등 마산 인근 지역의 경찰들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시위 진압은 진압경찰의 진압조와 사복경찰의 체포조의 협력 체계로 전개되었다. 방패를 든 진압경찰관이 선두에 나서 시위대를 분산시키면 사복 경

16) 이은진(2008); 차성환(2011); 정주신(2019); 부마위원회(2021);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1989)를 검토하여 그룹을 유형화하고 활동을 이하의 내용과 같이 정리하였다.

찰관이 시위대에 잠입하여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방식이다. 시위 진압의 또 다른 축은 군이다. 10월 18일 마산지역에서 야간시위가 격렬해지고 21시 이후 39사단 병력이 출동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차례로 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이때 투입된 군부대는 39사단 외에 진해지역에 있었던 육군대학, 해군통제부, 육군수송학교 병력 등이며 특히 부산지역 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던 특전단 중, 1공수특전여단 일부 병력과 5공수특전여단 전 병력이 마산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위수령이 발동된 뒤 투입된 위수군은 주요시설 경계 임무와 함께 시위진압에도 투입되어 시위대를 체포했다.

시위를 수사한 그룹에는 시위 진압과 마찬가지로 경찰그룹이 중심에 있었으나 사안에 따라서 정보기관 등이 나서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경찰서로 연행된 시위 참여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이 구속, 입건, 구류, 훈방을 결정하였으나, 이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책임을 맡았다. 한편 조사를 맡은 경찰들은 연행되어 온 시위대의 범죄행위를 알지 못한 채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 가혹행위는 주로 허위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연행된 중학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석방하지 않고 다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일부 시위 주동자들에게는 다른 시국사건과 엮으려는 시도도 하였다.

③ 시위 진압 및 수사 지원 그룹에는 도청이나 시청, 동사무소, 교육청, 학교 등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시위를 진압하거나 수사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원활한 시위 진압이나 수사를 위해서 경찰서 등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을 처리한 기관이다. 도청이나 시청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시위 진압의 협조와 시위 예방을 위하여 시위의 진원지인 경남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는 휴교나 추계 가정실습을 결정하였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수업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야간부 학교는 휴교를 지시하였으며 고

등학교에는 특별지도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감, 마산시장 등은 경남도경국장이 주재하는 시위 진압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한편 ④ 시위 진압 및 수사 과정의 피해자 그룹이 발생했다. 마산항쟁 동안 시위 진압으로 505명이 마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시위 참가자가 아닌 연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기 위하여 구타와 고문 같은 가혹행위가 행해졌다. 마산항쟁 주동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다. 일부 참가자는 군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최근 부마항쟁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⑤ 사법처리 및 사법처리 피해자 그룹도 있다. 마산경찰서로 연행된 505명에 대한 입건여부는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1차로 이루어지고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요원이 최종 판단했다. A급은 구속하여 군사재판이나 일반법원 재판에 회부토록 군검찰부나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B급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였으며, C급은 훈방 조치했다. 마산항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은 46명이다. 이중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인원이 6명이고 공소기각이 결정되어 석방된 인원이 40명이다. 한편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 마산지청으로 송치된 사람은 불구속 인원까지 포함하여 13명이었다. 당초 마산경찰서는 긴급조치 9호 위반죄뿐만 아니라 소요죄 등도 함께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군검찰부로 송치했으나 군검찰부는 이들 14명에 대해 소요죄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마산지청으로 이송하였다. 마산지청은 14명 중 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고 5명에 대해서만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1979년 12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해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마산지원은 마산지청에 이들에 대한 구속취소를 요청했다. 마산지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마산지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또한 마산

항쟁의 즉결심판 인원은 125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고 중·고등학생도 1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산경찰서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이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처리했다. 항쟁 이후에도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거나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이웃의 편견과 낙인, 수사과정에서 구타나 고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도 나왔다.

⑥ 시위 전개와 진압 과정의 목격(지원) 및 취재 그룹도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시위를 목격한 그룹이 있다. 이들은 시위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시내를 오가며 시위를 목격하였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을 목격하기도 했다. 단순히 목격만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변 건물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손뼉을 치며 응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시위대에 음료수 등을 내놓거나 다친 시위대를 무료로 치료해 주는 등 시위를 지원해 주었던 사람도 있었다. 시위를 취재한 그룹에는 먼저 부산일보 마산 주재 기자가 있었다. 공수특전여단의 폭력행위 등을 기록하였다. 해외언론도 시위 취재에 참여했다. 마산에서 연이틀 대규모의 항쟁이 발발하자 일본 동경방송(TBS) 기자는 마산으로 직접 와서 취재하였다. 마산경찰서 출입 및 취재기자들도 있었다. 당시 부마항쟁을 취재했던 언론인은 대부분 유신체제에 순응하는 보도 형태를 보였지만 일부 기자들은 항쟁의 현장에 나와 경찰과 시위대 양쪽에서 공격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 활동을 벌였다.

마지막 행위그룹으로 ⑦ 시위 진압 및 수사 등의 통제그룹이 있다. 이는 대체로 정부 기관으로 청와대를 정점으로 중앙정보부, 총리실, 내무부와 그 외 관련 부처, 공화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일 야간시위가 격렬해지자 청와대에서는 계엄사령관에게 마산 시위 진압의 책임을 맡겼다. 중앙정보부에서 정보 2차장의 주재로 청와대 관계관, 공화당 간부, 총리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위에 대한 대책

을 의논했다. 19일 새벽에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참석한 경남도 경 국장 주재의 비상회의가 마산경찰서에서 열렸다. 이날 낮에는 내부 무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통금시간의 연장이 발표되었다. 중앙정보부는 20일 이후부터 시위 연행자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4. 마산항쟁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분석

마산항쟁의 주요 행위그룹의 유형과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이 장에서는 Larry Hackman과 Joan Warnow-Blewett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단계를 수행하였다. 이 단계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여 도큐멘테이션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Hackman & Warnow-Blewett 1987, 21)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성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는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좁은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설문 원 2010, 25-27)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선 마산항쟁 행위그룹의 유형 및 활동의 정리에 이어, 이 장에서는 마산항쟁의 일부 행위그룹에 대해서 세부 활동과 생산기록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는 부마단체의 수집현황에서 수집 활동에 취약했던 시위 진압 및 수사 그룹과 그 지원 그룹의 유형별 활동을 보완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구체화 된 수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1) 마산항쟁 행위그룹 세부활동 및 생산기록 유형

마산항쟁 행위그룹 중에서 시위진압 및 수사를 지원한 그룹의 세부 활동을 <표 1>,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그에 따른 생산기록의 유형을

분석했다. 시위 진압 및 수사를 주도한 그룹의 세부 활동과 생산기록의 유형은 반복적이고 전 기간에 걸쳐 있어 이 장 후단에 별도로 정리했다.¹⁷⁾

〈표 1〉 마산항쟁 행위그룹 세부 활동(10월 18일)

일시	당시 기관명	연번	활동	세부내용
10.18. 새벽	경남대	①	비상교수회의	수업 및 시험 정상 진행
10.18. 07:00	경남대	②	격문수거 (교직원)	
10.18. 12:15	경남대	③	긴급교수회의	휴교 결정
10.18. 점심시간	경남대	④	시위해산 설득 (윤태림 학장)	
10.18. 14:00	마산대	⑤	추계가정실습	19일부터 1주간, 시위 집결 예방
10.18. 14:15	경남대	⑥	휴교령 방송 및 휴교공고문 게재	휴교
10.18. 15:10	경남대	⑦	시위대 제지 (교직원)	학교 밖으로 시위대 진출 저지
10.18. 17:00	관련 중앙부처 등	⑧	시국대책회의	전국 고등학교 특별 지도 반 운영 결정
10.18. 19:10	마산시	⑨	내무부장관과 시장간 긴급통화	
10.18. 19:10	마산경찰서	⑩	치안본부장과 서장간 긴급통화	서장과 시단장 통화
10.18. 저녁부터	마산 관내 동사무소	⑪	비상근무 (직원)	전등불 끄고 비상근무
10.18. 19:30~	마산 관내 공공기관	⑫	시위대의 공공기관 공 격	여러 공공기관 시설 및 장 비 파괴 등
10.18. 20:43	경상남도	⑬	군병력 지원요청	창원39사단 및 부산2관구 시령부에 요청
10.18. 23:30	마산경찰서	⑭	39사단장 마산경찰서 도착	

17) 이은진(2008); 정주신(2019); 부마위원회(2021);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1989);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 홈페이지(2022)

마산항쟁은 10월 18일 경남대학교에서의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전날(17일)에 이미 부산항쟁의 소식이 마산지역과 경남대에 전해졌기 때문에 학교 당국도 긴박하게 돌아갔다.(이은진 2008, 207) 그리고 다음 날(18일) 새벽, 수업과 중간고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상교수회의가 개최되면서 마산항쟁 행위그룹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기록도 생산되었다.

새벽에 있었던 ① 비상교수회의 이후 아침나절을 지나면서 학생들의 움직임과 학내 분위기에 이상함을 감지한 학교 당국은 12시 15분에 ③ 긴급교수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의 휴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에 대한 내부보고 과정과 결과의 공식화, 상급 교육당국 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여러 기록의 생산을 추정할 수 있다. 인근의 마산대에서도 학생들의 시위참여를 막기 위해서 1주일 동안 ⑤ 추계가정실습을 결정하였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경남대에서 휴교가 결정되는 과정과 유사한 경로를 거쳐서 기록을 생산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들에게도 통제가 가해졌다. ⑧ 시국대책회의에서 전국 고등학교에 특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다시 시군교육청으로, 마지막으로 학교까지 업무지시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도반 운영을 검토해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생산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중복적인 기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관별로 세부적인 기록도 생산되었을 것이다.

⑨ 내무부장관과 시장 간 긴급통화의 후속 조치로 예측할 수 있는 ⑪ 비상근무의 경우에는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지시가 내려가고 동사무소에서는 비상근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기록을 생산하였다. 이때 비상근무에 관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기록도 생산되었고 비상근무 결과에 따른 보고공문도 생산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⑫ 시위대의 공공기관 공격으로 경찰서, 동사무소, 시청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각 기

관에서는 피해 규모를 내부적으로 산정하고 정리하여 상위기관에 보고했을 것이다. 상위기관에서는 여러 기관의 피해를 취합하여 또 다른 기관으로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에서 ⑬ 군병력 지원요청을 긴급하게 하면서, 그 근거를 문서화하여 남겼을 가능성도 높다.

〈표 2〉 마산항쟁 행위그룹 세부 활동(10월 19일)

일시	당시 기관명	연번	활동	세부내용
10.19. 01:30	중앙정보부부산 지부	①	긴급비상회의 (도경국장 주재)	시위확산 대책 논의
	경남도경			
	경남교육청			
	마산시			
	마산경찰서			
	39사단 경남대			
10.19. 아침	마산시 동사무소	②	시위 관련 시내 청소	직원, 통반장 및 청소차량 총동원
10.19. 아침	경상남도 마산시	③	김성주도지사 마산 도착	
10.19. 10:30	진해경찰서	④	시위확산대책회의	진해 시위 확산차단, 진해 통금시간 연장
10.19. 11:05	내무부	⑤	통금시간 연장 발표(특별 지시)	마산시와 창원출장소 일 원
10.19. 18:00	마산시 동사무소	⑥	반사회 개최	마산 관내
10.19. 저녁	각 대학교	⑦	교수, 지도교사 시위 현 장 투입	시위 동향 파악 및 학생 설득 등
	각 고등학교			
10.19. 밤	각 고등학교	⑧	고등학생 시위 참여	일부 학생 검거
10.19.	마산교육청	⑨	14시까지 단축수업 지시	고등학생 시위참여 방지
	각 학교			
10.19.	마산교육청	⑩	휴교 지시	야간부 학교 20일까지 휴 교 지시
	각 학교			

전날(18일)의 시위는 늦은 밤을 지나 새벽까지 이어졌고 2시쯤 역전 파출소 앞에서 해산되었다. 밤이 지나고 이어진 다음 날(19일)의 시위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에 다시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경남대가 휴교에 돌입하고 진압군 병력이 시내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낮의 시위가 용이치 않았기 때문이다.(이은진 2008, 246)

이날(19일), 행위그룹 활동의 시작은 새벽에 다시 시작되었다. 1시 30분에 도경국장의 주재로 ① 긴급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시위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했다. 그러므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기관별로 관할업무에 맞는 시위 대응 계획이 수립되고 관할 하급기관이나 학교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하급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②, ④, ⑤, ⑥, ⑦의 업무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록이 생산되었을 것이다. 가령, ⑥ 반사회 개최 후, 반사회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주민의 행동요령이 포함된 지침을 만들어서 회의에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을 생산하였을 것이다.

19일 밤에는 ⑧고등학생 시위 참여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검거되었는데 창신고, 마산고, 경상고, 중앙고 등의 학생뿐 아니라 마산동중, 창신중 등 일부 중학생도 포함된 21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29) 이때 학생들의 시위 참여와 지도반 점검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기록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도교사는 점검 후 내부보고 형태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문서화했을 것이고 학생 및 학교의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에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서 경찰서와 교육청, 경찰서와 학교, 교육청과 학교 상호 간에도 관련 공문이 오갔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시위 참여 여파로 ⑨, ⑩과 같은 업무¹⁸⁾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지시문서 발송이 이루어지고 학교별로 시위 참여 현

황 등에 관한 보고내용도 문서화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시위 진압 및 수사를 주도한 경찰그룹의 세부활동과 생산기록의 유형이다. 마산항쟁 동안 경찰의 주된 업무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시위의 진압과 연행된 시위대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활동이며, 이 활동이 항쟁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마산항쟁의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경남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시위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사복형사들이 교내에 잠복 대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첩보보고서나 동향 보고서와 같은 문서가 생산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정보 대책이나 특별보고와 같은 문건도 생산하였을 것이다. 이후 시위 진압과 관련하여 시위진압부대의 출동과 진압과정, 결과를 보고하고 문서화했을 것이다. 또한 진압부대별 근무일지나 진압일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채증을 위한 사진기록도 활발히 생산했을 것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치안 상황을 기록하는 치안일지와 각종 보고서류 등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마산지역뿐 아니라 인근 경찰서의 경찰과 경찰서장이 차출된 만큼 해당 지역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와 관련된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에는 신문조사나 진술조서 등의 조사 관련 서류 외에 훈방, 즉심, 입건, 구속에 따라서 각 사안의 처리절차별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서류를 생산했을 것이다.

2) 마산항쟁 도큐멘테이션 영역

마산항쟁 행위그룹의 활동과 생산기록의 유형 분석 등을 통해서

18) 관련 연구에는 업무의 발생 일시가 명확하지 않았다. 마산항쟁의 진행과정과 공공기관의 관여업무를 고려해 볼 때 이 두 업무행위는 <표 2>의 ① 긴급비상회의의 결과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79년 10월 18일부터 위수령이 발동된 10월 20일 정오까지 주요 기록의 생산자와 생산기록 및 수집 대상 기록의 유형을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마산항쟁 행위그룹 유형별 주요 기록생산자 및 생산·수집대상 기록 유형

그룹구분	주요 기록 생산자	주요 생산기록 및 수집대상 기록유형
① 시위 전개 그룹	대학생	구술기록(가족 포함), 학적기록, 메모 및 일기류 등 개인기록
	회사원, 상인 등 시민	구술기록(가족 포함), 메모 및 일기류 등 개인기록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구술기록(가족 포함), 학적부, 메모 및 일기류 등 개인기록
② 시위 진압 및 수사 그룹	경찰	첩보 및 상황보고 등 각종 보고서, 진술서 및 송치서 등 수사기록, 치안일지 및 근무일지 등 일지류 기록, 범죄사건부 및 체포구속인 명부 등 대장류, 업무수첩, 구술기록
	군, 중앙정보부	작전보고서, 부대이동명령서, 상황 및 결과보고 등 각종 보고서, 근무일지 및 장비사용일지 등 일지류
③ 시위 진압 및 수사 지원 그룹	도청, 시청, 동사무소 등	시정일지 및 근무일지 등 일지류, 예산지출서류, 자체 회의서류, 시위상황 및 피해상황 등 보고서류, 직원현황 기록 및 직원 업무수첩, 구술기록
	교육청, 학교 등	교무일지 등 일지류, 학적부, 시위참여 현황 등 보고서류, 교직원 현황 기록, 교직원 업무수첩, 구술기록
④ 시위 진압 및 수사 과정의 피해자 그룹	피해자	구술기록(가족 포함), 진압 및 수사기관 기록
⑤ 사법처리 및 사법처리 피해자 그룹	사법기관	불기소 등 검찰수사 종결기록, 기소장 등 검찰수사기록, 판결문 등 재판기록
	피해자	구술기록(가족 포함), 수사 및 사법기관 기록

그룹구분	주요 기록 생산자	주요 생산기록 및 수집대상 기록유형
⑥ 시위 전개 및 진압 과정 목격(지원) 및 취재 그룹	일반시민, 상인, 의료인	구술기록, 메모 및 사진 등 개인기록, 진료일지
	기자 등 언론인	구술기록, 취재기록, 사진, 기사, 영상 기록
	정치인, 시민단체 등	지지선언 등 선언문, 메모 및 일기류, 구술기록
⑦ 시위 진압 및 수사 등의 통제 그룹	중앙정보부	각종 지침 및 지시문서, 시위상황취합 자료 및 상황보고서류, 기관일지, 수사기록
	청와대, 정부부처 등	분야별 대응문건, 상황취합 및 보고기록, 회의서류, 부처별 관할기관 대응 지시문서, 기관일지, 구술기록

먼저, ① 시위 전개 그룹에서 주요 생산자를 정리하면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과 회사원, 상인 등 일반시민, 그리고 일부 중·고등학생이 대표적이다. 시위 전개 과정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시위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일기류와 같은 기록을 발굴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구술기록도 생산하여 시위 상황을 증거해야 한다. 필요시 학생 소속 학교의 교무일지나 학적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

또한 ② 시위 진압 및 수사 그룹에서 생산한 기록도 시위 전개 그룹에서 생산한 기록과 함께 마산항쟁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핵심기록이다. 특히 이 기록은 시위 진압과 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이 그룹에서 수집된 기록은 군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에 편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도 시위 진압과 수사를 일선에서 주도만큼 어느 그룹 보다 많은 기록을 생산했다. 첩보나 시위 상황 등의 보고서류, 수사단계별 수사기록, 송치기록, 치안일지와 같은 일지류 등이 수집의 범위에 해당한다. 마산 인근의 여러 경찰서도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그동안 도청, 시청, 교육청, 학교 등 ③ 조사대상인 시위 진압 및 수사 지원 그룹에서 생산한 기록은 주요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

으나, 이 기록도 항쟁의 전체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하는 필수 기록이다. 시정일지와 근무일지 등의 일지류 기록에서부터, 예산지출서류, 자체 회의서류 등도 수집대상이다. 당시 직원현황을 파악하여 구술기록과 업무수첩도 생산하고 수집해야 한다. 더 상세한 수집대상범위는 앞장의 세부 생산기록의 유형을 참고할 수 있다.

④ 시위 진압 및 수사 과정의 피해자 그룹과 ⑤ 사법처리 및 사법처리 피해자 그룹에서 생산한 기록은 진압과정,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 사법처리 과정, 이후 과정으로 피해자 관련 기록을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로 기록의 유형을 구분하여 수집할 수 있다. 이 그룹에서는 구술기록이 핵심 수집대상 기록이며 필요시 피해자 가족을 포함하여 수집할 수 있다. 단계별로 가해자 그룹의 기록도 함께 수집해야 한다. 사법기관 그룹에서는 검찰수사기록과 검찰수사종결기록, 판결문 등의 재판기록이 수집대상이다.

⑥ 시위 전개 및 진압 과정의 목격(지원) 및 취재그룹에서는 제삼자적 입장에서 마산항쟁을 바라본 관련 기록과 내·외곽에서 마산항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주요 수집대상에 해당한다. 시위의 목격자와 시위를 취재한 기자 등 언론인, 그리고 시위를 지원한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으로 생산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수집대상 기록의 유형에는 메모나 일기류와 같은 개인기록과 기사, 사진 등 취재기록, 진료기록, 지지 선언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⑦ 시위 진압과 수사 등의 통제 그룹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보부와 각 정부부처에서 마산항쟁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이 수집대상이다. 시위대응과 관련된 지시문서, 시위현황 취합자료 및 상황보고서, 각종 회의서류, 기관일지 등이 있다.

이상으로 마산항쟁의 행위그룹과 행위그룹별 주요 기록 생산자, 생산자별 생산 및 수집 기록의 유형 등의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큰 틀에서 정리하였다.

3) 마산항쟁 행위그룹 결락기록 조사

앞서 분석한 행위그룹 등을 대상으로 결락기록을 조사하였다. 이는 마산항쟁 행위그룹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징, 환경 등의 현장 상황의 확인을 통해서 도큐멘테이션 영역에서 정리한 생산기록의 상태를 분석하고 기록화를 비롯한 결락기록의 관리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였다.

시위 진압 및 수사 지원 그룹에 대한 결락기록의 조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시위 진압 및 수사 그룹은 담당자 인터뷰와 기록의 처분 관련 공문을 확인하였다. 조사내용은 1979년도 생산된 기록물철의 보유현황, 폐기현황, 이관현황¹⁹⁾이며, 기록관이 설치²⁰⁾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표 4>는 시위 진압 및 수사 지원 그룹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이다.²¹⁾

<표 4> 마산항쟁 행위그룹 정보공개 청구 결과

기관명	청구내용별 공개여부			비고 ²²⁾
	보유현황	폐기현황	이관현황	
경상남도	공개	공개	공개	취하
창원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취하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 동사무소	미제출	-	-	취하
경남교육청	(부분)공개	자료확인불가	자료확인불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고등학교	(부분)공개	-	-	

19)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을 조사하였다. 경남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은 경남 기록원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공사립대학교에는 기록물관리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2022.01.18, (8781965~8781968)

기관명	청구내용별 공개여부			비고 ²²⁾
	보유현황	폐기현황	이관현황	
창원교육지원청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중학교	부존재	-	-	
경남대학교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창원대학교	공개	부존재	부존재	취하
경남기록원	공개	-	-	

1979년 생산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경상남도과 경남교육청 및 관할 고등학교 일부, 창원대학교²³⁾, 경남기록원이 있었으며, 1979년도 생산한 기록을 폐기했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 기관은 경상남도가 있었다.

이 중에서 마산항쟁과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은 경상남도에서 2017년에 폐기한 『지출장부』 61권과 창원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1979년 2학기 교무일지』, 경남기록원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는 『79년징계처분』과 『80년징결의결요구서』이다. 폐기된 『지출장부』에는 마산항쟁 당시 시위대응과 관련하여 각종 명목으로 예산의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1979년 2학기 교무일지』에는 매일의 학사일정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표 1>의 추계 가정실습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다. 『79년징계처분』과 『80년징결의결요구서』에는 마산항쟁의 대응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마산항쟁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시위진압 및 수사 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경남경찰청의 경우, 1979년도에 생산한 기록의 보유현황과 이관현황은 존재하지 않았다.²⁴⁾ 폐기현황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폐기 내역을 확인하였

22)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자와 협의 후 취하하였다. 대신 청구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았다.

23) 창원대학교의 당시 교명은 마산대학이었다.

지만 1979년 생산한 목록은 없었다. 아울러 마산중부경찰서의 경우, 현재 보유기록의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보유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관현황과 폐기현황은 경남경찰청의 문서로 대신 살펴보았지만,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시위 진압 및 수사 그룹의 생산기록 유형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기록은 『치안일지』이다. 현재까지 마산항쟁 당시 마산경찰서에서 생산한 『치안일지』는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생산도 확인된 바가 없는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남경찰청의 폐기 대상 기록의 목록을 보면 마산경찰서 인근의 다른 경찰서의 『치안일지』가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 포털에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남지역의 다른 경찰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치안일지』가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당시 마산경찰서에서도 『치안일지』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유기록의 목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일지』가 어딘가에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결락기록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기관별 매일의 업무 상황을 일지류 기록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경찰서의 치안일지를 비롯하여 학교의 교무일지, 마산항쟁 행위그룹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부산시청의 시정일지(부마위원회 2021, 41) 등과 같은 기록이 생산되었다. 이와 같은 일지에는 당시의 상황이 비교적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의 보존기간이 길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비록 일부 기관이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관과 보유기록에 대한 목록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이 존재한다. 셋째, 기관마다 기록 관리 및 보존환경이 다르며, 특히 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기록과 서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이를 고려한 조사 및 수집과정이 필요하

24) 이 현황은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이다.

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수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유기록에 대한 현황 외에 관리하지 않거나 폐기한 기록 등을 포함한 결락기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부마항쟁 결락기록 관리방안

이상으로 수행된 예비분석과 기록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부마항쟁 결락기록의 관리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정책 수립 전의 예비분석 및 본격적인 수집활동에 앞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부마항쟁 행위그룹을 대상으로 결락기록의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부마항쟁은 이미 40년이 지났고 관련 기록은 합법적 혹은 관리부실로 폐기되는 등으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마항쟁의 여러 행위그룹 중 가해 그룹으로서 역할을 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은 은폐되거나 폐기되기 쉽다. 진실을 알려줄 만한 기록은 일찌감치 선별되어 체계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이상민 2016, 29)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기록은 우연히 혹은 무관심 등으로 존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²⁵⁾ 더욱이 본문에서 살폈듯이 마산항쟁 행위그룹 중 일부 기관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부마항쟁 결락기록이 능동적으로 수집된 적도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선, 1979년에 생산된 기록에 대해 필요한 조치²⁶⁾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5) 앞장의 일부 행위그룹에 대한 결락기록의 조사는 공공기관의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기록이 우선적으로 조사되었다. 각 부서의 개인 캐비닛이나 별도 공간에서 보관되고 있는 기록들 중에서 등록되지 않거나 목록화 되지 않은 기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26) 1979년 생산된 기록의 폐기 보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앞서 분석한 결락기록의 분포 현황과 그동안 수집된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한 후 세부적인 수집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마항쟁에는 다양한 행위그룹과 기록의 생산자 및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예비단계 수준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기록의 생산자별 생산기록의 유형을 도출해야 한다. 부마항쟁 관련 단체에서 수집한 기록의 성격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수집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구체화한 수집정책에는 수집 방향,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리하고 결락기록에 관한 성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 존재하는 기록 중,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관리되지 않는 기록에 대해서는 수집하고, 폐기 등으로 비어있는 부분은 생산을 통해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집 활동이 필요하다. 수동적인 수집정책은 한계가 있다. 보통, 외부적 작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공기관일 경우 더욱 그렇다. 수집 협조 공문 한 장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계선조직의 성향, 경험 그리고 조직의 업무환경, 문화와 업무체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업무협조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수집기관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들이 고려된 수집활동이 필요하다. 수집대상기관의 담당자를 비롯한 관련 구성원에게 낮은 단계이지만 의무성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자문위원회와 다른 수집실무위원회 구성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수집기관과 대상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정책적으로 업무환경을 정리하여 위원회 구성원들의 활동반경을 넓혀주고 제약은 축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드시 직접 기록을 보관하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넷째,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록에 대해서 분류, 보존, 공개, 활용 등에 대한 정밀한 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부마재단 경우 기록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관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구현된 수집기록의 현황을 보면 관리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난다.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아 관리정책을 개선하고 개선된 내용을 실제 기록의 관리 단계에 접목한다면 수집된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뿐 아니라 향후 수집될 기록의 효율적 관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부마항쟁 단체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수집 전·후와 관계 없이 물리적 관리를 포함하여 기록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사, 보유 및 수집기록의 정보에 대하여 지적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마항쟁 중심 단체에서는 조사 및 수집기록에 관한 생산정보, 소재정보, 관리정보 등을 수집정책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는 고스란히 외부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관련 기록의 활발한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6. 맺음말

마산(馬山)은 1899년에 개항의 도시로 근대 역사에 등장했다. 뒤이어 그 공간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성취했다. 도시로서 흔치 않은 역사적 경험을 100년 남짓한 기간에 축적한 것이다. 그 중심에 마산항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핵심과 변화를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노력은 그 시간의 역동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이 이곳의 역사와 지역성을 치열히 증거 해야 하는 이유이다.

올해는 부마항쟁이 43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낙인이 찍혀 평생 취업하지

못하고 무직자로 살아온 삶이 있다고 한다.(국제신문, 2021) 그들은 아직도 과거의 암울한 억압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안과 물리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부마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서 억울함을 벗고 명예를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의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부마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결락기록의 수집 등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논하는 실행방법론에 따라 예비분석을 수행하고 마산항쟁의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정리한 후, 결락기록을 직접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결락기록의 현황 조사 및 분석, 수집정책 마련과 능동적 수집, 수집기록의 관리정책 수립 및 통합적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부마항쟁 전반에 걸치지 않고 마산항쟁에 국한된 한계가 있으나, 이는 효과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예비분석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이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과정을 부마항쟁 전체로 넓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마항쟁 결락기록의 수집전략 등 기록화 방안을 마련한 후, 결락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부마항쟁의 진실규명과 역사연구 활성화는 이 토대위에서 한걸음 더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나경 (2019).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2, 185-224.
- 김경호 (2000).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정치학회보, 10(1), 1-21.
- 김장환 (2015). 국회 기록화 전략 모형 수립 연구. 기록학연구, 46, 189-231.
- 박범중 (2021). 한국현대사에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5(6), 297-326.

- 김유승, 류반디 (201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194.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47.
- 신동희,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 안병욱 (2020). 부마항쟁의 의의와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 *부마민주항쟁 학술총서: 1979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6-17.
- 오항녕 (2003).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윤리. *기록학연구*, 7, 109-127.
- 이상민 (2002). 역사를 위하여 :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공공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225-262.
- 이상민 (2016).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수집전략. *기록학연구*, 48, 5-44.
- 이은진 (2008).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창원: 불휘*.
- 이은진 (2020). 부마민주항쟁의 기억과 기념, *부마민주항쟁 학술총서: 1979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170-196.
- 차성환 (2011). 부마항쟁과 한국언론. *항도부산*, 27, 47-97.
- 장성미 (2016).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현황과 기록학적 분석 시론. *기록학연구*, 50, 231-271.
- 정상희 (2016). 청남대 건립 관련 잔존 기록물 조사 연구. *기록학연구*, 47, 161-193.
- 정승안 (2018). 부마민주항쟁시기의 한국경제와 지역사회의 여건. *사회사상과 문화*, 21(2), 189-225.
- 정주신 (2019). 마산의 민주화 운동 비교 분석: 1960년 3·15의거와 1979년 10·18 부마항쟁. *한국과 국제사회*, 3(2), 5-58.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홍순권 (2011).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27, 1-46.
- Ham, F. Gerald. The Archival Edge. 1975. *The American Archivist*, 38(1), 5-13.
- Hackman, Larry & Warnow-Blewett, Joan. 1987.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The American Archivist*, 50(1), 12-47.
- Samuels, Helen. 1986. Who Controls the Past. *The American Archivist*, 49(2), 109-124.
- 최현진 (2021. 9. 2.). ‘민주화 성지’ 라는 자부심. *국제신문*,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10903,22019000655>.

〈보고서·자료집·간행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백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20).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30년 1989-201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21).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위원회공고제2021-5).

〈참고사이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홈페이지. http://buma1979.or.kr/new_buma/

〈법률 및 지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23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료 관리 지침 (2020).

